

#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고 방안

2020. 5

김민형

■ 문제의 제기 .....	4
■ 「여성기업법」상 여성기업의 개념 및 지원정책 .....	5
■ 여성 건설기업 실태 및 정부 지원제도 현황 분석 .....	10
■ 여성 건설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23



-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활약이 커지고,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에서 여성 건설기업의 역할은 타 산업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시됨.
- 여성기업에 대한 개념과 지원정책 등 여성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1995년 2월 5일 제정)에서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임.
- 건설업(F)에서 여성기업의 비중은 19.1%(2018년 기준)로 19개 산업 중 중간 정도 수준이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건설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됨.
  - 2014년 전체 건설기업의 16.6%였던 여성기업이 2018년에는 19.1%로 증가함.
  -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5,667개사(20.7%), 전문직종 건설업이 2만 1,684개사(79.3%)임. 그러나 개별 업종 내 여성기업 비중은 종합건설업이 19.8%로 19.0%인 전문직종 건설업보다 소폭 높음.
- 종합건설업 중 여성기업은 1,671개사로 전체 종합건설기업의 13.9%(2017년 기준)를 차지함.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에 23.8%, 지방에 76.2%가 분포하며, 95%가 6등급 이하 업체들로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74.4%는 공공 기성액이 전체 기성액의 10% 미만임.
  -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업체당 평균 기성액은 약 35억원(2017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 업체당 평균 기성액의 23.0% 수준에 불과함.
  - 발주기관별로는 공공과 민간의 비중이 35:65로 공공 기성실적이 0%인 업체도 27.0%를 차지함.
  -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의 경우 재무상태 안정성 측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체 및 중소 종합건설업 평균보다 양호하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종합건설업뿐 아니라 여성기업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함.
- 여성 건설기업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지원 제도 및 공공 조달시 판로지원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여성 건설기업이 인식하는 지원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자금지원과 인력지원을 제외한 여타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업체 중 50% 미만이며, 자금지원을 제외한 7개 지원책에 대해 90% 이상이 활용해 본 적이 없으며, 유용성에 대한 평가 역시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여성 건설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여성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부여 대상 공사의 확대, 둘째, 공공기관의 수행공사 구매목표 비율을 물품 및 용역과 동일한 수준인 5%로 상향 조정, 셋째, 건설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한 여성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대행 서비스 제공 등이 요구됨.
  -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공사 규모를 현재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경영상태 우대 점수를 부여하는 공사 구간인 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며, 공공기관 수행공사 구매목표 비율을 현재 3%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물품, 용역, 공사에 구분 없이 5%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I 문제의 제기

- 정부는 매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현 정부 들어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여성 장관이 취임하는 등 경제 전반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 제4조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매년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균형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여야 함.
- 상기 기본계획하에 정부는 2018년에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여성기업의 도약을 위한 대책을 강화함. 이어 2019년에는 성장기 여성기업들의 기술혁신·자금·판로 지원을 대폭 확대함.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 유연함, 창의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여성기업이 더욱 부각되고 역할도 더 커질 것으로 인식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함.
-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 산업으로 인식되는 대표적인 분야인 건설산업에도 여성 장관과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이 선임되는 등 젠더(Gender)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여성 리더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임.
  - 현재 여성 건설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국가 50억원, 지방자치단체 1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제만이 운영되는 등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음.<sup>1)</sup>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건설산업의 성격과 생산방식의 변화가 가속되면서<sup>2)</sup> 향후 건설산업에서도 여성 건설기업인들의 활약이 기대되나 실제 여성 건설기업의 역할은 타 산업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건설산업 내에서 여성기업의 실태 및 위상과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여성 건설기업의 인식을 파악하는 한편, 정부의 여성 건설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1) 여성 건설기업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하는 여성 건설기업 지원제도에서 살펴봄.

2)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건설산업에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이 접목되면서 건설 생산방식도 기존의 현장 시공 중심에서 사전 제작(Prefabrication) 및 현장 조립(Precast) 등 현장을 벗어난 공장형 제작 형태로 변화함. 이에 따라 과거 사람의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여 시공하던 것에서 건설 로봇, 중장비의 자동화 등 IT를 중심으로 한 기술력이 주요한 요인으로 부상함[김민형(2018.12), 「일본 건설업의 여성인력 활용 촉진 정책 및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Ⅱ 「여성기업법」상 여성기업의 개념 및 지원정책

### 1. 지원대상으로서 여성기업의 개념 및 주요 지원제도

- 현재 제도적인 지원대상으로서 ‘여성기업’의 개념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여성기업법)」 제2조에 정의됨.
- 이에 따르면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법 제2조 제1호)’임.
  -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과 같음.
  - ①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함)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 [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함. 이하 같음)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 포함)와, ②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의미함.
  - 이를 볼 때 제도적인 지원대상으로서 여성기업의 판단 기준은 ‘등기상 대표’가 ‘여성’인가의 여부임.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1999년 6월 1일 최초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4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됨. 특히 지난 2019년은 동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해였음.
  - 1999년 당시 「여성기업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이후 타법 개정에 따른 개정 이외의 주요 개정 사유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음.
  - 첫째, 법상 지원대상인 여성경제인의 범위를 넓혀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2005.5.31), 둘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2009.5.21 및 2013.7.30), 셋째, 여성기업의 제품을 기존의 물품에서 용역 및 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함(2018.6.12).

〈표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연혁

연도		제/개정 사유
시행	제/개정	
2018.12.13	2018.06.12	(일부 개정) - 「여성기업지원법」상 여성기업 제품의 정의를 '기존의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동일하게 '물품' 외에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포함하도록 명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 제고 및 여성기업의 판로확장 근거 마련(법 제9조 제1항)
2017.07.26	2017.03.29	(타법 개정)
2016.09.30	2016.03.29	(타법 개정)
2016.07.28	2016.01.27	(일부 개정)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년 1월)로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 개편(법 제2조 제1호) - 여성기업 확인, 확인 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 신청 제한(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의3 신설) -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 사후관리 근거 마련을 통한 위장 여성기업 퇴출 유도(법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 7까지, 제21조 제1항 신설)
2014.01.01	2013.07.30	(일부 개정)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의무화(법 제19조 제3항)
2009.12.30	2009.12.30	(타법 개정)
2009.11.22	2009.05.21	(타법 개정)
2009.11.21	2009.05.21	(일부 개정)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비율 규정 -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개편
2007.04.11	2007.04.11	(타법 개정)
2007.04.11	2007.04.11	(타법 개정)
2007.03.27	2006.12.26	(타법 개정)
2005.05.31	2005.05.31	(일부 개정) - 종전에는 여성 경제인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의 임원으로 한정하여 기업의 여성 임원이어도 해당 기업의 소유자가 여성이 아닌 경우 여성 경제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동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여성 경제인을 모든 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확대(법 제1조 및 제2조 제2호)
2002.06.26	2002.03.25	(타법 개정)
2001.04.01	2001.02.03	(타법 개정)
1999.06.01	1999.02.05	(제정)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 연혁을 정리한 것임.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여성기업의 정의(제2조) 외에 창업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자금 및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창업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제8조), 공공기관장은 여성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제9조).
- 또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제10조).
-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4조), 매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설치하며(제6조), 2년마다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제7조).

❖ 특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제3항의 여성 중소기업 구매촉진 조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과 용역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총액의 각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총액의 3%를 구매목표로 제시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①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2. ‘2019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sup>3)</sup>

❖ 여성기업 지원제도 중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2000년부터 매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 필요)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촉진계획의 목적은 여성기업 정책을 정립하고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여성 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 이하의 내용은 여성기업 포털([www.Wbiz.or.kr](http://www.Wbiz.or.kr)), “2019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①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② 여성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③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가장 최근 제시된 기본계획(2019년 7월 9일 발표)에서는 예년에 비해 여성 창업 자금을 확대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기술혁신·자금·판로 지원을 대폭 강화함.

- 작년 7월에 발표된 기본계획의 경우 ‘여성 창업·벤처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여성기업을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육성한다’는 방향하에 예년에 비해 여성 창업 자금을 확대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에 대한 기술혁신·자금·판로 지원을 대폭 강화함.

■ 2019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전략과 과제들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음.

- 첫째, 우수 여성인력의 창업·벤처 활성화임. 이를 위해 단계별 여성 전용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총 300억원 규모(모태펀드 180억원 출자)의 여성 전용 벤처 펀드를 조성(2022년까지 총 1,000억원 조성 예정)하여 우수 여성기업의 발굴, 투자를 확대함. 또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개선 및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확대(25억→75억원)하고 멘토링,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둘째, 기술혁신, 금융, 인력 등 지속성장을 지원함. 이는 유망 여성기업들이 창업 단계를 넘어 중견,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생산성 혁신, 정책자금, 인력, 전문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여성 전용개발자금 지원(100억원), R&D 참여시 여성기업 가점 부여, 여성기업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영(5,000억원), 일자리 매칭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한 우수 인력 지원, 여성 경제인 경영자 양성과정 및 네트워킹 지원, 규제발굴 등을 위한 여성경제인 DESK 운영 등을 포함함.
- 셋째, 국내·외 판로 촉진임.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9조 2,000억원까지 상향하고(전년 대비 7,000억원, 8% 상향), TV 홈쇼핑 등을 통해 여성기업 제품 판로를 개척하며,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온라인 수출 지원 등 해외 밀착 지원을 실시함.
- 넷째, 공공경제 확립, 상생협력 활성화 및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등을 지원함. 또한 협동조합을 여성기업 인정 범위에 포함하여 협업·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차별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대상을 확대함.

■ 이와 같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감성, 사고(思考)의 유연함 및 창의성이 더욱 부각되고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보다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그림 1〉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전략 · 과제

여성 창업벤처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여성기업을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육성

추진전략	추진과제
우수 여성인력 창업·벤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여성 전용(우대)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li> <li>■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확대 조성 및 홍보 강화</li> <li>■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여성 창업 허브로 개편</li> <li>■ 기업가정신·창업 교육 등을 통한 우수인력 발굴·육성</li> <li>■ 취약계층 여성(여성가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강화</li> </ul>
기술, 금융, 인력 등 지속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 전용 R&amp;D,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술혁신 지원</li> <li>■ 성장유망 여성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li> <li>■ 일자리 매칭 플랫폼 등을 통한 우수인력 지원</li> <li>■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li> <li>■ 전문상담, 규제발굴 등 여성경제인 DESK 운영</li> </ul>
국내·외 판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내실화</li> <li>■ TV 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기업 제품 판로 개척</li> <li>■ 수출 초보기업 등에 대한 해외진출 밀착 지원</li> </ul>
연구조사 및 정책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 관련 정책연구 및 통계조사 등 수행</li> <li>■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li> </ul>
공정경제 확립 및 상생협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 전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기업 활동 촉진</li> </ul>
여성기업 차별관행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 차별관행 실태 및 사례 조사</li> <li>■ 여성기업 차별금지 인프라 확충</li> </ul>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9.7),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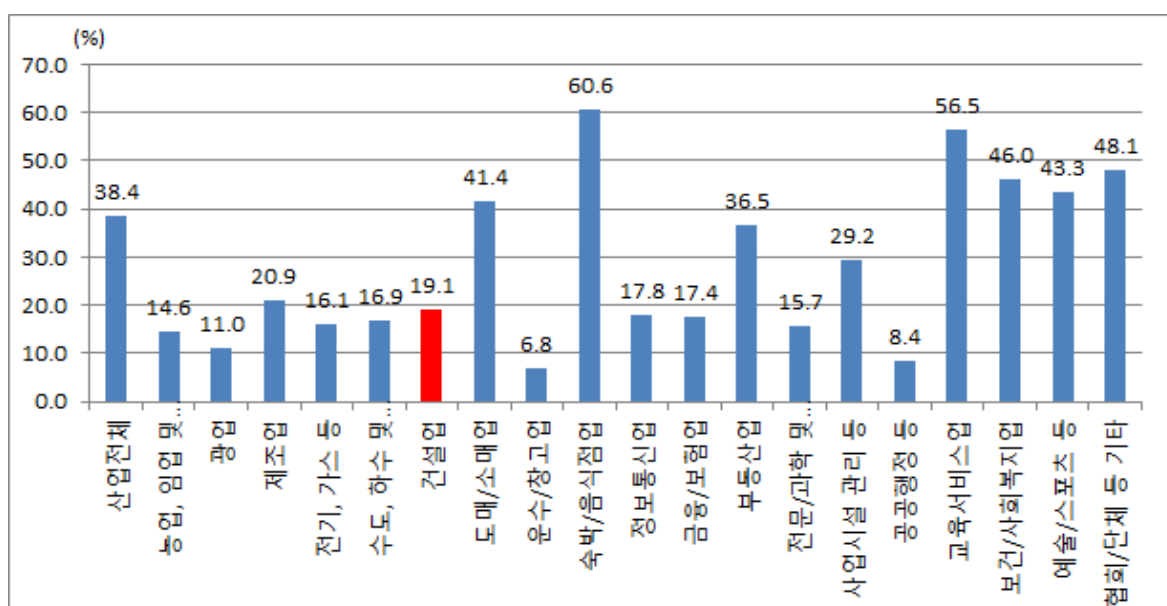
### Ⅲ 여성 건설기업 실태 및 정부 지원제도 현황 분석

#### 1. 여성 건설기업 실태 개관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건설업(F)에서 여성기업의 비중은 19.1%로 산업 전체 평균(38.4%)에 비해 크게 낮으며, 제조업(20.9%)에 비해서는 미미하게 낮은 수준으로 전체 19개 산업 중에서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다만, 부동산업의 경우 여성기업의 비중이 36.5%로 전체 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그림 2〉 참조).

-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 업종별 여성기업 비중이 가장 저조한 업종은 운수/창고업(6.8%)과 공공행정 등(8.4%)의 업종으로 전체 기업 중 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다음으로 10~20%대 미만에 속하는 업종으로는 건설업(19.1%)을 비롯하여 광업(11.0%), 전기·가스 등(16.1%), 농업·임업 및 어업(14.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7%), 수도·하수 및 폐기물 등(16.9%), 금융·보험업(17.4%), 정보통신업(17.8%)이 있음.
- 우리나라 전 산업의 평균 여성기업의 비중이 38.4%에 달하는 것은 숙박·음식점업(60.6%), 교육서비스업(56.5%), 협회/단체 등 기타(48.1%), 보건·사회복지업(46.0%), 예술/스포츠 등(43.3%), 도·소매업(41.4%)과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 직종으로 인식되는 산업들에서 여성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그림 2〉 산업별 여성기업 비중(2018년)



자료 : 통계청(www.kostat.go.kr), 「전국사업체조사」(검색일 : 2020.02.19) , “시도/산업/대표자 성별 사업체 수”.

■ 최근 5년간 여성 건설기업의 추이를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2014년 대비 2.5%p, 5,791개사가 증가함. 직종별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에서의 여성기업 비중이 19.8%로 건설업 평균(19.1%)보다 다소 높고, 전문직 건설업에서의 여성기업 비중은 19.0%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 2014년 전체 건설기업 중 16.6%, 2만 1,560개사였던 여성기업이 2018년에는 19.1%, 2만 7,351개사로 증가함.
- 건설업에서 여성기업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여성기업의 수는 전문직종건설업(79.3%)이 많으나 각 업종 내에서 차지하는 여성기업의 비중은 종합건설업이 전문직종 건설업보다 다소 높음.
- 종합건설업에서 여성기업은 2014년 4,243개사로 16.9%를 차지하던 것이 2018년에는 5,667개사, 19.8%로 2014년 대비 2.9%p, 1,424개사가 증가함. 전문직종건설업의 경우에는 2014년 1만 7,317개사, 16.6%에서 2018년에는 2만 1,684개사, 19.0%로 2014년 대비 2.4%p, 4,367개사가 증가함.

<표 2> 건설업 직종별 여성기업 비중 추이

(단위 : 개사, %)

구분	대표자 성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설업	계	129,667	134,427	137,220	138,478	142,840
	남자	108,107	110,935	112,614	113,017	115,489
	여자	21,560 (16.6)	23,492 (17.5)	24,606 (17.9)	25,461 (18.4)	27,351 (19.1)
종합 건설업	계	25,044	26,241	26,784	26,875	28,662
	남자	20,801	21,537	21,794	21,828	22,995
	여자	4,243 (16.9)	4,704 (17.9)	4,990 (18.6)	5,047 (18.8)	5,667 (19.8)
전문직종 건설업	계	104,623	108,186	110,436	111,603	114,178
	남자	87,306	89,398	90,820	91,189	92,494
	여자	17,317 (16.6)	18,788 (17.4)	19,616 (17.8)	20,414 (18.3)	21,684 (19.0)

주 : ( )안은 여성기업 비중임

자료 : 통계청(www.kostat.go.kr), 「전국사업체조사」(검색일 : 2020.0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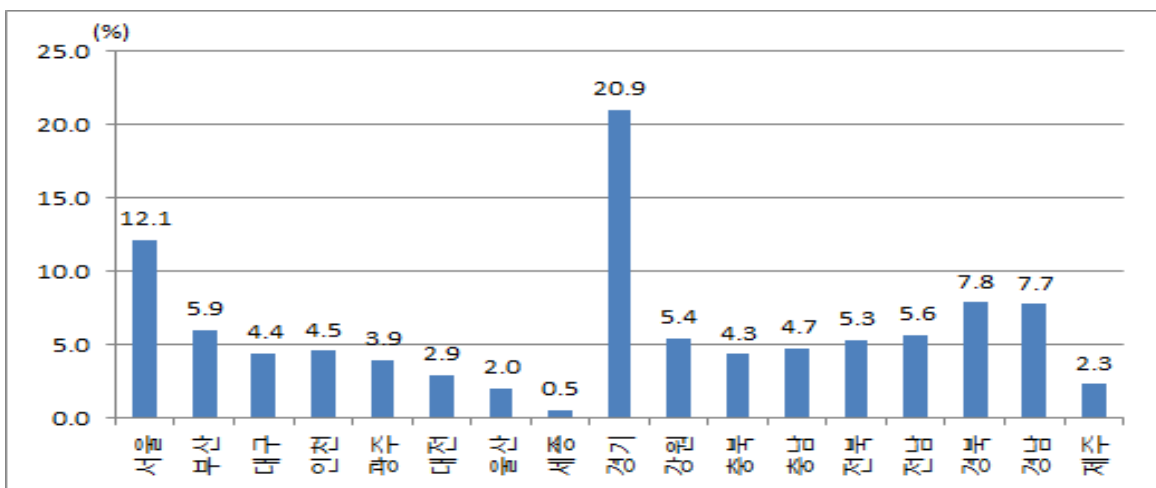
■ 여성 건설기업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그림 3>과 같이 개별 지역으로는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가장 높음. 이를 다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세종시 포함)와 지방으로 구분해 보면 시보다는 지역에 분포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건설기업들 중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각각 12.1%, 4.5%, 20.9%로 전체 여성 건설기업

의 37.5%가 서울과 수도권에 분포해 있음.

- 서울/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광역시(세종시 포함)에 19.6%, 그리고 제주도를 포함 기타 지방에 43.1%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4)</sup>
- 개별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2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이 12.1%를 차지함. 그 외에는 경북과 경남이 각각 7.8%와 7.7%를 차지하나, 광역시와 기타 지방 모두 전반적으로 10%에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그림 3〉 여성 건설기업의 지역별 분포(2018년)



자료 : 통계청(www.kostat.go.kr), 「전국사업체조사」(검색일 : 2020.02.19).

■ 여성 건설기업을 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sup>5)</sup>이며, 이중 특히 소기업의 비중이 98% 이상을 차지함. 이와 같은 여성 건설기업의 규모별 현황은 대다수의 여성 건설기업의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시사함.

- 〈표 3〉의 2014~2016년까지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성기업의 99.9% 이상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소기업<sup>6)</sup>의 비중이 98% 내외임.
- 다만, 2014년에 비해 2015년과 2016년에 미미하게나마 소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중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 건설기업들 중 일부는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됨.

4) 합계가 100.2%인 것은 반올림에 기인한 것임.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건설업을 구분하면, 중소건설업은 3년간 평균 매출액 등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함.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에는 재무제표상 자산총계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이 적용됨.

6)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기업이며,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함(중소벤처기업부, sminfo.smba.go.kr).

〈표 3〉 여성 건설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

(단위 : 개사, %)

구분	2014	2015	2016
여성 건설기업(A)	21,364	23,459	24,468
중소기업(B)	21,356	23,450	24,455
중기업	193(0.90)	346(1.47)	381(1.56)
소기업	21,163(99.10)	23,104(98.53)	24,074(98.44)
B/A(%)	99.96	99.96	99.95

주 : 1) 〈표 2〉와 수치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통계청의 통계를 인용한 기준 연도 차이에 기인함.

2) ( )안은 비중임.

자료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여성기업 관련 통계」.

## 2. 종합건설업 중 여성기업 실태<sup>7)</sup>

### (1) 지역별 분석

■ 2017년을 기준으로 종합건설기업 중 여성기업의 수는 1,671개사로 전체 종합건설기업의 13.9%를 차지함.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에 23.8%, 지방에 76.2% 분포하고 있어 지방에 분포하는 비중이 전체 여성 건설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광역시(세종시 포함)보다는 기타 지방에 분포하는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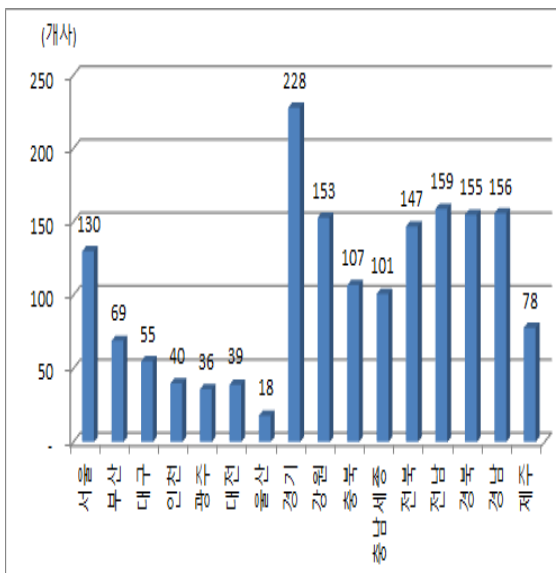
-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130개사), 인천(40개사), 경기(228개사)에 총 398개사로 전체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시(세종시 포함)에 318개사로 19.0% 그리고 기타 지방 955개사로 57.2%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
-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건설업 중 광역시(세종시 포함)와 기타 지방에 위치한 기업의 비중은 62.7%이며, 종합건설기업 중 광역시 및 기타 지방에 위치한 여성기업은 76.2%로 13.5%p 더 높음. 이와 같이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에 위치한 기업이 더 많음.
- 세부적으로는 경기도가 228개사(13.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남(159개사, 9.52%), 경남(156개사, 9.34%), 경북(155개사, 9.28%), 강원(153개사, 9.16%)의 순임. 반면, 여성 종합건설업체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18개사, 1.08%)이었음.

7) 여성 건설기업 중 전문건설기업 자료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이하에서는 종합건설업 중 여성기업에 대한 분석으로 한정해서 다룸. 이하에서 활용된 자료는 대한건설협회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여성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선정, 제공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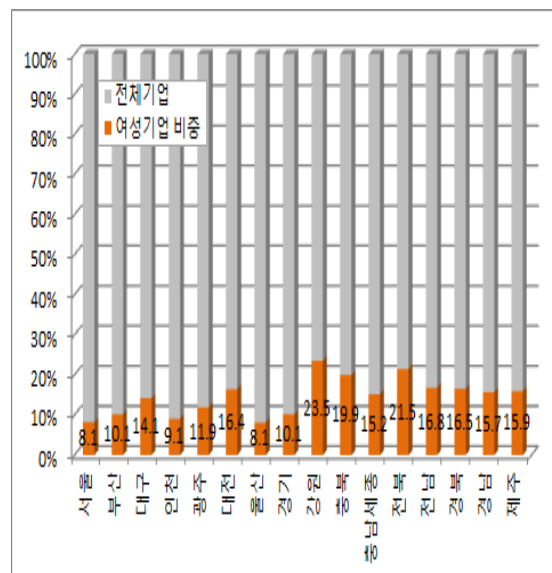
- 한편, 시도별로 전체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여성기업의 비중을 보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가 2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북이 21.5%로 양 지역이 20%를 상회함. 시(市) 중에서는 대전이 16.4%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구로 14.1%를 나타냄.

- 서울과 인천의 경우 전체 종합건설기업에서 차지하는 여성기업의 비중이 각각 8.1%와 9.1%로 7개의 시(市)중 울산 다음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냄.

<그림 4> 여성 종합건설기업 지역별 분포



<그림 5> 여성 종합건설기업 지역별 비중



주 : 비중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종합건설업조사” 및 내부자료.

## (2) 규모별 및 공종별 ·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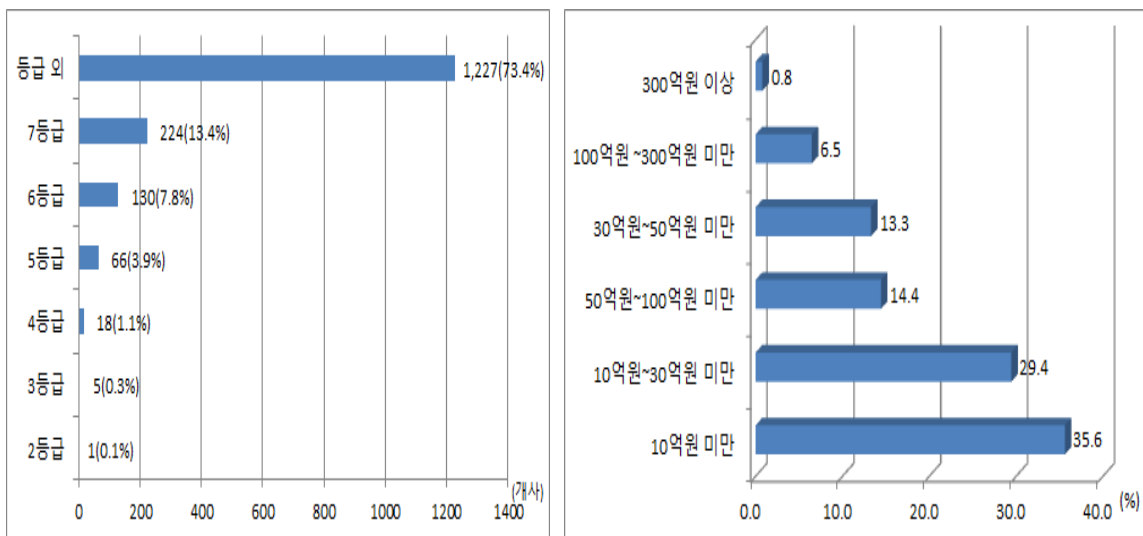
- 여성 종합건설기업을 등급별로 분석한 결과 95%가 6등급 이하(시평 2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이었음.

-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종합건설기업들 중 1,227개사인 73.4%가 조달청 등급별 공사배정 규모를 적용하는 7등급에 속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었음.
- 이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업체는 하나도 없으며, 2등급 업체 1개사(0.1%), 3등급 업체 5개사(0.3%), 4등급 업체 18개사(1.1%), 5등급 업체 66개사(3.9%), 6등급 업체 130개사(7.8%), 7등급 업체 224개사(13.4%)로 나타남.

❖ 더욱이 2017년을 기준으로 한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업체당 평균 기성액은 약 35억원으로 같은 해 종합건설업 업체당 평균 기성액의 23.0% 수준에 불과함.

-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의 2017년 기성액을 보면,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억원 이상인 업체는 0.8%(13개사)에 불과하며, 65.0%인 1,087개사가 30억원 미만을 기록함. 더욱이 연평균 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체도 35.6%를 차지함.
- 2017년 종합건설업의 업체당 평균 기성액이 152억 5,000만원<sup>8)</sup>임을 감안할 때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업체당 평균 기성액은 종합건설업체 업체당 평균 기성액의 23.0% 수준임. 이는 대다수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시사함.

<그림 6> 여성 종합건설기업 등급별 분포(2017) <그림 7> 여성 종합건설기업 업체당 평균 기성액(2017)



주 : 비중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이하 동일.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이하 동일

❖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의 기성실적(2017년 기준)을 공종별로 보면 토목과 건축의 비중이 약 30 : 70의 비중을 차지하며, 발주기관별로는 공공과 민간의 비중이 35 : 65 수준으로 나타나 건축과 민간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sup>9)</sup>

- 2017년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업체당 평균 토목공사 기성실적은 9억 8,900만원이며, 건축공사는 25억 700만원으로 토목공사가 건축공사의 약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같은 기간 여성 종합기업의 업체당 평균 공공공사 기성실적은 12억 7,000만원이며, 민간공사는 22억 1,380만원으로 공공공사가 민간공사의 약 57% 수준에 그침.

8)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종합건설업의 총기성액은 183조 4,062억원이며, 업체 수는 1만 2,028개사인 것으로 집계됨[대한건설협회(2019.2), “2018년 4분기 기준 주요건설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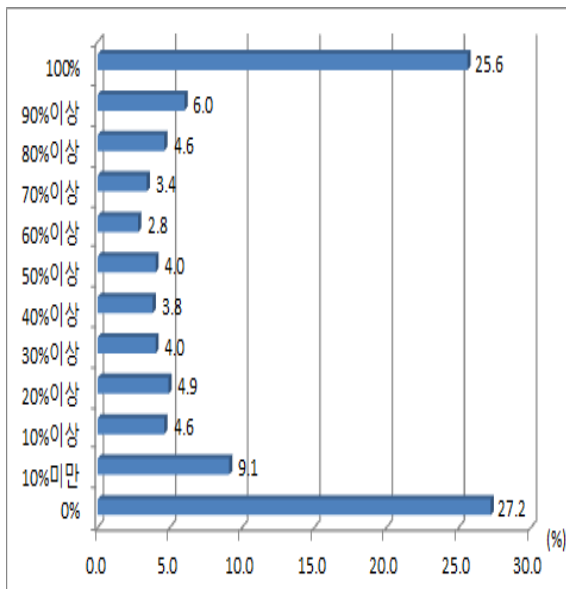
9) 이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제공한 2017년 여성기업 1,671개사의 기성실적을 바탕으로 산정한 것임.

특히 공공공사 기성액이 전무(全無)한 기업도 27.0%나 되며, 53.6%의 업체들은 공공공사 비중이 전체 기성액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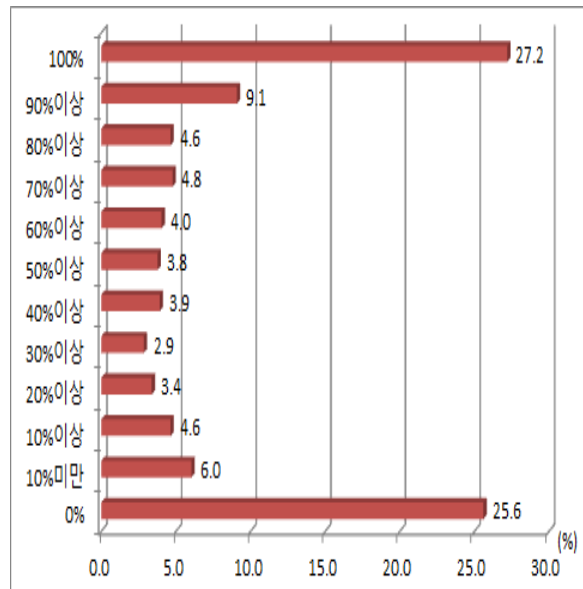
- 2017년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의 기성실적을 발주기관별로 구분해 보면, <그림 8> 및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편중도가 매우 커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25.6%는 공공공사가 100%인 반면, 0%인 업체도 27.0%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민간공사 역시 100%인 기업이 27.2%인 반면, 0%인 기업도 25.6%를 차지함.
- 한편, 공공공사 기성실적이 0%인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여성 종합건설기업 중 절반이 넘는 53.6%는 공공공사 기성 비중이 전체 기성액의 5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공종별·발주기관별 실적은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여성기업들이 공공공사 수주에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8> 여성 종합건설기업 공공공사 기성 비중



<그림 9> 여성 종합건설기업 민간공사 기성 비중



### (3) 재무상태 분석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의 재무상황을 보면, 안정성 측면에서는 종합건설업 평균, 중소종합건설기업 평균 및 여성기업 전체 평균에 비해 양호한 반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종합건설업 평균, 중소 종합건설기업 평균뿐 아니라 전체 여성기업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수준임(<표 4> 참조).

- 2017년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 전체, 중소 종합건설기업 및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을 보면, 종합건설업 평균의 경우 각기 46.2%와 116.2%, 중소 종합건설기업은 57.9%와 72.6%를 기록함.
- 종합건설업 전체 및 중소 종합건설기업 평균과 비교하여 여성 종합건설기업은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77.1%, 부채비율이 49.7%로 자기자본비율은 가장 높고, 부채비율은 가장 낮아 세 유형의 기업 중 안전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업 전체 평균이 각기 5.7%와 5.1%, 중소 종합건설기업은 5.3%와 4.2%를 기록한 반면,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경우에는 -6.7%와 -1.9%로 적자를 기록하여 종합건설업 전체 평균이나 중소 종합건설기업 평균에 비해 매우 저조함.
-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평균 재무비율을 여성기업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면, 여성기업 전체의 평균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이 각기 35.2%와 184.1%임. 반면,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기 77.1%와 49.7%로 재무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당기순이익률은 -1.9%로 4.6%를 기록한 여성기업 전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재무상황(2017)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 수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종합건설업 전체 평균	12,872	46.2	116.2	5.7	5.1
중소 종합건설기업 평균	9,678	57.9	72.6	5.3	4.2
여성 종합건설기업 평균	1,671	77.1	49.7	-6.7	-1.9
여성기업 전체 평균 (2018)	42,803 <sup>주2)</sup>	35.2	184.1	n.a.	4.6

주 : 1) 각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2) 여성기업 수는 동 실태조사에 사용된 표본 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9.12),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

■ 여기서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대다수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이 자금을 자체조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역으로 대부분 중소 및 영세기업들인 여성 건설기업들이 정책자금 조달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을 시사함.

- 2019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여성 건설기업 7,510개사 중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 등 '외부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13.8%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86.2%는 '자체조달'했다고 응답함.<sup>10)</sup> 이러한 경향은 매출액이 적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3. 여성 건설기업 지원제도

#### (1) 공공공사 입찰 지원제도

- 정부는 2013년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를 개정함.
- 이에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지자체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평가 항목 중 ‘신인도’를 신설하고 여성기업에 대해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
  - 당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물품·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및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기회 확대를 위해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
  - 즉, 기존 제도의 경우 여성기업의 토목·건축공사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미만 1억 5,000만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 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모든 지자체 발주공사에 ‘신인도(+1점)’ 평가를 신설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한 중소기업체)에 대해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함.<sup>11)</sup>
- 이어 2018년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기존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던 여성기업 등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 우대 조건을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공사의 경우 10억원 이상 3억원 미만)로 확대함.
  - 기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 평가하도록 하고 있었음.
  - 이후 2018년 들어 기존에 1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던 가산 평가를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이를 2018년 7월 1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함.

10) 중소벤처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9.12),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 pp.81~88.

11) 구체적인 대상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제출 및 공동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함.

- 이에 따라 공사 규모별로 가산 점수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상태 평가시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일반공사의 경우 1.5점,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일반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경우 1.0점,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일반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경우 0.5점, 그리고 2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1.0점이 가산됨.

〈표 5〉 추정가격에 따른 일반공사 규모별 여성기업 우대 점수

구분	경영상태 평가 배점	여성기업 등 우대 점수(10%)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	15점	1.5점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	10점	1.0점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공사	5점	0.5점
2억원 미만 공사	10점	1.0점

주 : 이는 저자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에 따른 일반공사 규모별 심사기준에 제시된 경영상태 평가 배점에 따라 우대 점수를 산정한 것임.

- 이와 같이 현재 건설업 분야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적격심사시 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 0.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음.

## (2)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여성 건설기업의 인식<sup>12)</sup>

-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에 대해 여성 건설기업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도, 이용 여부 그리고 이용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지원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책의 경우 90% 이상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조사에 응답한 7,510개사의 여성 건설기업<sup>13)</sup> 중 자금지원과 인력지원에 대해서만 50% 이상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른다는 응답도 각기 23.6%와 29.6%에 이름.
- 특히 자금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응답기업의 81.6%가 유용하다고 응답하여 8가지 유형의 정부 지원책 중 유일하게 전 산업의 여성기업 평균을 상회하는 응답률을 나타냄. 다음으로 유용하다고 평가된 지원정책으로는 인력지원 정책<sup>14)</sup>과 세제지원 정책으로 각기 48.3%와 42.5%가 유용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전체 여성기업보다 낮은 수준임.

12) 이하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9.12),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 중 건설업과 여성기업 전체 평균에 대한 조사결과만을 대상으로 저자가 재정리 한 것임.

13) 응답 여성 건설기업에는 종합건설업(건물, 토목)과 전문직별 공사업(도장, 도배, 내장목공, 창호)을 포함함[중소벤처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9.12),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 p.51].

14) 인력지원 정책으로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외국인력제도, 신규채용 인건비 보조제도(예: 청년인턴제,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보조 등)가 있음.

〈표 6〉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여성 건설기업의 인식(2018)

(단위 : %)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 효과			
	잘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음	모름	있음	없음	유용하지 않음	보통	유용함	
								건설기업	여성기업 평균 <sup>주2)</sup>
자금지원 정책	58.0	18.5	23.6	18.7	81.3	3.4	15.0	81.6	75.4
인력지원 정책	53.1	17.3	29.6	6.8	93.2	14.1	37.6	48.3	59.5
세제지원 정책	48.1	16.7	35.2	2.6	97.4	0.0	57.5	42.5	58.9
기술지원 정책	39.6	14.6	45.8	3.0	97.0	0.0	88.3	11.7	49.1
판로지원 정책	40.1	14.0	45.9	2.7	97.3	0.0	66.7	33.3	62.8
정보화지원 정책	33.5	15.9	50.7	1.0	99.0	0.0	100.0	0.0	59.0
수출지원 정책	28.4	17.5	54.1	1.1	98.9	0.0	100.0	0.0	67.5
사업전환/재창업지원 정책	31.4	15.5	53.1	1.0	99.0	0.0	100.0	0.0	42.1

주 : 1) 본 조사는 여성 건설기업 7,510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임.

2) '여성기업 평균'은 조사 대상이 된 전 산업의 여성기업 평균을 의미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9.12), 전제서, pp.283~299 내용 재정리.

■ 세제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정책의 경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기술지원과 판로지원의 경우에는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중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 세제지원은 48.1%였으나, 기술지원과 판로지원의 경우에는 각기 39.6%와 40.1%로 '모른다'는 응답비율인 45.8%와 45.9%보다 각기 6.2%p와 5.8%p나 낮음.
- 이러한 낮은 인지도에 따라 활용도도 자금지원이나 인력지원보다 낮아 세 가지 지원책 모두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97% 내외에 달하고 있음. 이는 효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타 산업의 여성기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함.
- 더욱이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제도로 간주되는 공공공사 입찰 우대제도인 판로지원의 경우 7,500여 개의 응답기업 중 45.9%가 모르고 있었으며, 97.3%가 이용한 적이 없고, 유용하다는 응답도 응답기업의 1/3에 그쳐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임.

■ 정보화지원·수출지원·사업전환/재창업 지원의 경우에는 응답 여성 건설기업 중 50%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 내외에 불과함. 이러한 낮은 인지도에 따라 응답기업의 거의 대부분인 99%가 활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세 가지 지원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정보화 지원 33.5%, 수출지원 28.4%, 사업전환 및 재 창업지원 31.4%에 불과함.

■ 반면, 여성기업 전체적으로는 응답기업의 59.0%가 정보화지원이 유용하다고 평가하였으며, 67.5%가 수출지원 정책이 유용하다고 평가함. 이와 같이 양 지원정책에 대한 여성 건설기업의 평가가 낮은 것은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 정보화나 해외건설 등에 대한 중소기업 및 영세 여성 건설기업들의 무관심뿐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해당 지원들이 여성 건설기업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건설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되면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드론을 활용한 현장관리, 모듈 생산, 스마트 터키 등 건설현장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화 지원은 향후 여성 건설기업들의 공공공사 수주와 생산성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많은 여성 건설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여성 건설기업들의 경우 성장에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자금지원이라는 응답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세제지원(26.7%)으로 판로·기술·정보화 등 간접지원보다는 직접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술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유용성 평가에서도 가장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 건설기업들은 자금지원 정책에 대해 여성기업 전체(40.1%)보다도 그 필요성을 높게 평가함.
-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여성 건설기업의 경우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차입과 같은 외부자금 조달이 어렵고, 회사채 발행과 같은 직접자금조달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영자금 부족시 이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판로지원의 경우 예상과 달리 6.4%만이 필요한 정부정책이라고 응답함. 전술한 정부정책의 인지도 및 유용성 조사 결과와 연계해 볼 때 이는 현재 정부가 건설업에서 추진하는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우대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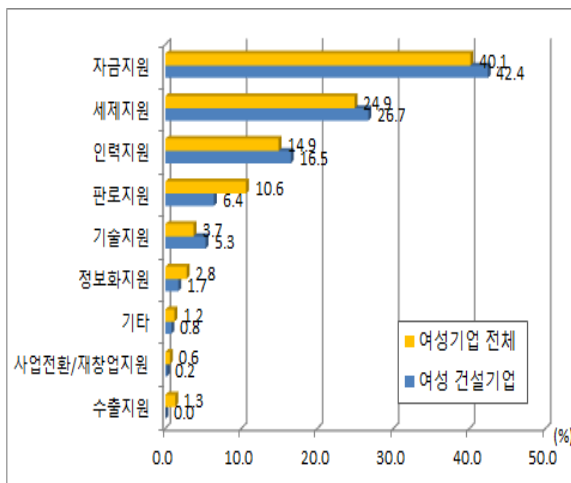
■ 여성 건설기업의 정부 정책 활용시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자격조건의 까다로움과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각기 25.5%와 21.8%로 1, 2위를 차지하여 여성 건설기업의 약 1/4이 아직까지 여성기업 관련 제도인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기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http://www.smpp.go.kr))에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여성기업 확인 신청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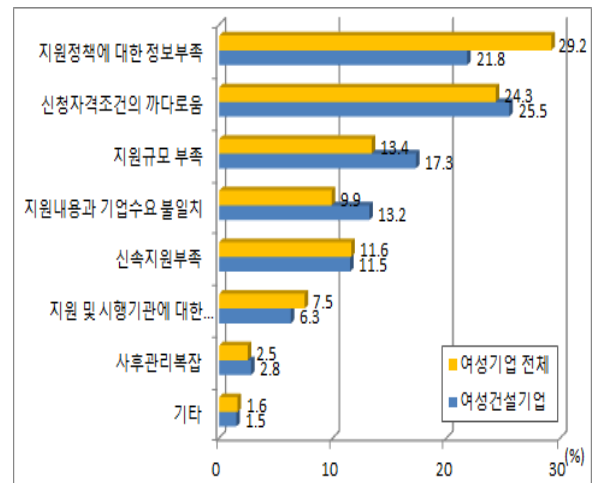
- 여성기업 확인을 위해서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①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SMPP) (신청기업) → ② 제출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 신청(신청기업) → ③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지회) → ④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지방중소기업청)의 절차를 거침.<sup>15)</sup>
-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공통으로 여성기업확인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i)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를, ii)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를 구비하여야 함.<sup>16)</sup>
- 응답 여성 건설기업 7,510개사 중 98.6%가 '일반법인'임<sup>17)</sup>을 감안할 때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준비 등이 인력 수가 작은 영세 여성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특히 여성 건설기업들의 경우 지원규모 부족, 지원내용과 기업 수요 불일치 항목에 있어서 여성기업 전체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어 정부 지원정책이 건설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그림 10〉 여성 건설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부정책



〈그림 11〉 여성 건설기업 정부정책 활용시 애로사항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9.12), 전계서, pp.300~308.

15)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http://www.wbiz.or.kr)).

16)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http://www.wbiz.or.kr)).

17) 중소벤처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9.12), 전계서, p.60.

## IV 여성 건설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1. 여성 건설기업 지원의 당위성

■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여성 건설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술한 여성 건설기업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 건설기업의 62.5%는 지방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종합건설업의 경우 여성 종합건설기업이 지역 건설업체 중 15~25%를 차지하여 여성 건설기업의 성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됨.

■ 둘째, 여성 건설기업은 9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됨. 따라서 건설산업의 발전 및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이며 약자기업인 여성 건설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정책이 요구됨.

- 중소기업은 첫째, 자본집중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잠재적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가 전체적으로 독점의 비효율로 흐르는 것을 저지하며 둘째, 기업심과 창업심이 강한 개인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여 시장경제의 신진대사(regenerative) 기능을 하며 셋째, 정치·사회안정의 근간인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넷째, 지방 인력의 수용과 지역경제의 기반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특정 산업 및 한 국가의 시장경제 발전에 초석이 됨.<sup>18)</sup>
- 이러한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여성기업을 중소기업과 더불어 약자기업으로 분류해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셋째, 여성 건설기업은 여성기업만이 가지는 장점을 통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잔존해 있는 건설산업의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남성기업에 대비한 여성 건설기업의 장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활한 소통과 화합의 기업분위기(30.6%),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24.2%), 여성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20.6%), 계획적이고 투명한 회사경영(17.1%) 등이라고 응답함.<sup>19)</sup>
- 이러한 여성 건설기업의 장점은 수직적 주종주의에 따른 산업 주체 간 및 기업 내 불평등한 갑을관계 형성, 연고주의에 기인한 부정부패 등 한국 건설산업의 부정적 문화<sup>20)</sup>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임.

18) 김민형(1997), 「중소건설업의 경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21.

19) 중소벤처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9.12), 전제서, p.256.

20) 윤영선(2008), 「한국 건설문화의 특성 및 혁신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p.38~56.

## 2. 여성 건설기업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 여성 건설기업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지원이나 판로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공공공사 기성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여성 건설기업들의 공공공사 수주액은 매우 저조함.
- 이는 여성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여성 건설기업들의 유용성 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여성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임. 따라서 여성 건설기업들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 지원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여성 건설기업의 정부 정책 활용시 애로사항으로 행정적인 사항 외에 ‘지원규모 부족’과 ‘지원 내용과 기업수요 불일치’가 전체 여성기업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의 실효성 낮음을 시사함.
- 첫째,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사를 현재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경영상태 우대 점수(10%)를 부여하는 공사 구간인 ‘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에서 1점 가점을 부여하는 공사 규모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임.
  - 해당 공사의 연간 규모를 파악해 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공사의 경우 2018년 2억원 이상<sup>21)</sup> 10억원 미만 공사가 당해 연도 전체 공공공사의 건수 기준으로는 31.9%이지만 금액기준으로는 13.3%임. 이중 2억원 미만 공사를 제외할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한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 비중은 10% 내외에 그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해당 공공공사 총액을 당해 연도 종합건설업 계약액 전체와 비교하면 총계약액의 3.3%에 불과한 수준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건설업 전체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3.9%임을 감안할 때 3.3%는 지나치게 미미한 수준임.
  - 이는 적격심사시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이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의 수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시사함.

21)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공사는 3억원 이상이나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업조사」의 공사 규모별 구분 구간이 2억원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정리함.

〈표 7〉 공공공사 규모별 비중(2018)

(단위 : 10억원, %)

공사 규모	합계		공공공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A)	71,798	141,916.9	31,401	35,557.8
2억~5억원 미만	13,886	4,612.6	6,212	2,000.7
5억~10억원 미만	10,857	7,799.1	3,802	2,715.7
2억~10억원 미만 합계(B)	24,743	12,411.7	10,014	4,716.4
B/A	34.5	8.7	31.9	13.3
2억~10억원 공공공사/전체 공사	-	-	13.9	3.3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조사」, “발주기관별 공사규모별 공사종류별 계약실적”(2020.3.27일 검색).

❖ 둘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에 근거한 ‘수행공사에 대한 구매 목표 비율’을 현재의 3%에서 물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게 5%로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여성기업 제품의 정의에 물품 외에 ‘제공하는 용역과 수행하는 공사’가 포함된 것은 2018년 12월 (시행일 기준)로 2020년이 시행 2년째 되는 해임. 그러나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이 물품과 용역은 5%인 반면, 공사는 3%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이와 같이 낮은 공공구매 목표비율에 따라 판로지원 제도에 대한 여성 건설기업들의 유용성 평가는 여성기업 전체 평균인 62.8%에 크게 못 미치는 33.3%에 그치고 있음(〈표 6〉 참조)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물품, 용역, 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정부 조달시 최소 5%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조달효율화에 관한 법률(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FASA)」에서 물품, 용역,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정부계약의 5%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sup>22)</sup>
- 일본 역시 구매 물품의 종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여성기업에 대한 판로 개척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정부와의 계약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를 계약하도록 하고 있음.<sup>23)</sup>

❖ 셋째, 여성 건설기업들에게 적합한 정보화 및 기술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산업과 4차 산업의 융복합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여성 건설기업들도 생산성을 증대하고 시대에

22) 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Section 7106), “The Government-wide goal for participation by small business concerns owned and controlled by women shall be established at not less than 5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all prime contract and subcontract awards for each fiscal year”.

23) 양인숙·강민정(2012), 「여성기업 육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정보화와 기술지원이 더욱 필요해질 것임. 따라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 여성 건설기업들에 적합한 정보화 및 기술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 넷째, 국토교통부, 건설 관련 협·단체 등 건설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성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가칭)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대행 서비스 등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성 건설기업에게도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전술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여성 건설기업의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 건설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러다 보니 이용 실적도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음.
- 이는 여성기업 지원제도가 국토교통부를 포함하여 건설 관련 기관에서 홍보되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여성경제인연합회와 같이 건설업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기관에 의해 다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여성 건설기업들의 정부 지원 활용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건설 관련 협·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알림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또한 영세 여성기업으로서 여성기업확인서의 신청 절차에 애로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대행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김민형(선임연구위원·mhkim@cerik.re.kr)